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원자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2016년 11월 21일

○ 논의 참여 포럼 위원 (무순)

안남성 (한양대학교)

양재영 (한국전력대학원대학교)

박석빈 (두산중공업)

김교운 (한국원자력연구원)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양희창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 자료 제공 포럼 위원 (무순)

조건우 (KINS)

정범진 (경희대학교)

류용호 (KINS)

박성원 (영산대학교)

송종순 (조선대학교)

○ 개관

트럼프의 공약사항이나 선거기간 중 발언 내용에는 원자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The Daily Caller의 Andrew Follet기자가 대선 후보들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은 기사¹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한 트럼프의 언급을 볼 수 있음. 이 기사에서 트럼프는 원자력을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며 인허가 프로세스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원자력은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있기에 천연가스 개발을 더 지지한다고 말했음.

이를 통하여 볼 때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 원자력산업이 후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철저하게 시장주의자인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경쟁에 의하여 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카터 대통령 때 상업용 재처리를 금지하는 등 경직되었던 원자력 정책이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완화되었듯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 중단과 같은 원자력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내에서는 가스발전의 경제성이 원자력발전을 앞서고 있고 석탄발전의 진흥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력산업이 크게 부흥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음. 이미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투자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SMR 지원 등)은 좀 더 힘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미국 내에서 가장 로비력이 강한 곳은 오일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원자력이 오일산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파리협약과 전기차의 보급확산으로 오일과 원자력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트럼프의 주위에 오일 및 석탄쪽 로비스트가 많이 있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축소와 관련해서도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을 지원하는 법률이 지난 연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5년간 연장 되었기에 실질적인 축소로 가기는 어려울 것임. 단지 트럼프가 재임한다면 화력발전의 증가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약간 우호적임.

아직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에너지를 정책을 담당할 장관이나 부장관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 논의에서는 원자력과 간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발언이나 공화당의 대선 강령에 포함된 원자력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함.

○ 안보분담 요구에 대하여

대선기간 중에는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허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그 발언은 안보분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핵무장 발언을 백지화했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발언을 백지화하기 전에도 핵무장허용은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실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했음. 일단 비확산체제의 모범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비확산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나라도 핵보유국화 하는 현상이 유발 될 것이기 때문임.

안보 분담비는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에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의 과제(보다 자유로운 연구개발 허용 등)를 풀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안보 분담비를 100%낸다 하더라도 이미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50%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액수로는 5000억 원에 해당되는데 이 비용은 미국이 당면한 군사적 현안, 즉 대륙간탄도탄 개량, 전술핵무기 개량, 핵잠수함 개량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적은 액수이기에 안보분담 자체로는 미국을 움직일만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임.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구입하는 무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무기구입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원자력산업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기에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지금 미국의 국립연구소는 록히드 마틴 등 민간 기업이나 대학이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록히드 마틴은 우리의 무기구입선 이기에 이들을 움직여 미국 정부를 설득한다면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기가 쉬울 것임. 이미 대만이 이러한 방법으로 공군과 협조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에 미국의 협조를 받는 등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우리나라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임.

이외에 미국의 요청으로 나가는 해외파병, 핵비확산을 위한 활동비용 등도 포함하면 레버리지 효과는 더 커질 것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고민하는 인사 즉, 일본 동경대의 곤도교수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인사를 배출하지 못한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선 과제 임. 이제라도 원자력 연구개발비의 5~10%를 무조건 국제협력(특히 미국 협력)에 배정하여 원자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필요함. 원자로 개발도 독자개발 독자수출보다는 공동개발 공동수출을 검토할 때가 되었음.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인 자원조달 문제를 생각할 때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출하는 경우 자원 조달에서도 공동개발 상대국의 금융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재생에너지 지원 철폐 공약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지원 철폐의 목적은 화력(석탄, 가스)에 투자해야한다는 트럼프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에너지 대선 공약을 발표한 장소가 셰일가스로 부침을 이룬 노스다코다의 주도인 비스마르크(프러시아 총리의 이름을 따와서 주도에 붙인 것은 독일 이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트럼프는 독일 이민 3세임) 시인데 미국의 변두리였던 이곳이 셰일가스 붐으로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하락으로 축복이 저주로 바뀐 곳 임.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셰일가스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에 트럼프가 바로 이곳을 노려 공격한 것임. 즉, 화력

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 당선되었기에 재생에너지 지원이 철폐까지는 안가더라도 상당 수준 축소될 것은 확실해 보임.

미국이 그동안 온실가스 협약에 미적거리다 파리협약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미국인의 60%는 기후변화를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조사보고도 있기에 에너지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의 의중을 잘 반영했다고 보며 특히 에너지 독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표를 잘 모았다고 판단됨.

그러나 파리협약탈퇴에는 참가국들의 동의 절차에 3년, 이후 실질적인 탈퇴 실효에 1년 등, 총4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임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여 자발적 감축 약속이나 Mission Innovation(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자금을 5년간 2배 증가)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킬 수는 있을 것임.

재생에너지 지원은 연방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연방정부는 대략 총지원의 1/3을 세금감면(PTC : Production Tax Credit, ITC : Investment Tax Credit)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에 연방정부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지원 법률(PTC, ITC)이 작년 말에 통과되었기에 앞으로 4년 동안은 지원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의하면 PTC와 ITC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은 37GW로 분석됨. 더구나 태풍 샌디가 지나갈 때 4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지만 유일하게 전기가 공급되었던 곳은 태양광이 설치된 일부 지역이었기에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분산발전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 있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원자력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며 트럼프가 의도한대로 셰일가스와 오일, 석탄 산업의 부활을 촉발할 가능성이 큼. 트럼프가 명확히 밝힌 키스톤 XL 파이프라인도 캐나다의 Sand Oil을 텍사스의 걸프 만까지 보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으로 양국의 오일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결국에는 오일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임.

발전원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감가상각이 거의 다 된 기존 원전을 제외하고 수명연장을 하거나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은 가스발전 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음.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위하여 백업발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로 응답성이 좋은 가스발전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은 공생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가스발전 위주의 IPP는 원자력발전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자력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는 국제적으로 이제 거의 사실로 인지되고 있고 셰일가스나 오일샌드의 환경파괴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압력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거나 원자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 특히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가 상생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원자력 (오바마 정부도 원자력 인프라 유지와 제조업 유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형원전)이기에 소형원전개발 연구나 공화당의 당론인 고준위폐기물 저장 등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아무튼 재생에너지의 축소여부에 상관없이 가스 생산(특히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에너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가스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미 정부나 한국가스공사 등은 셰일가스 수입계획을 마련해 놓았음)이지만 2025년경까지 물량이 기확보 되어있어서 장기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음.

○ 화력 규제 철폐 및 석탄 산업의 부활에 대하여

미국의 화력발전(특히 석탄발전)은 노후화 되어 교체기에 들어가고 있기에 석탄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화력발전을 설치하는 것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규제²를 통하여 화력발전의 확산을 막고 있었는데 이것을 트럼프가 선거에 잘 이용했다고 판단됨.

그러나 화력규제를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규제를 완화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음. 사실 미국 EPA는 HSC(Hyper Super Critical)의 경우 탄소포집 및 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석탄발전 증가 전략이 도출 될 수 있다고 봄.

화석연료의 증산정책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장기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이지만 원유기반인 우리나라의 정유/석유화학산업이 저가의 셰일가스 기반의 미국 화학산업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있음.

재생에너지 업계는 화력과 원자력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CO2규제에 의하여 사양길로 들어서는 듯 했던 화력이 살아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싸워야할 전선이 넓어지는 것으로 원자력에 대한 공격력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유카 마운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공화당 대선 강령)

유카 마운틴 프로젝트의 약사는 아래와 같음.

- 1987년 유카마운틴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100억 달러 투입)
- 2009년 공사 완료 시점 전에 심층수 오염 가능성 등 환경우려 제기로 백지화
- 2010년부터 오바마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Blue Ribbon위원회³를 만들어 24개월 활동한 후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하였음
: 스웨덴 등에서 사용한 단계별 동의 접근식으로 새 부지 선정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도 같은 방식을 권고하였음.
- 2016년 공화당 대선 강령에 유카마운틴 추진을 포함
- 2016년 8월 미국 NEI가 유카마운틴 프로젝트 추진 촉구

즉, 유카마운틴 저장장은 아직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예산만 지원된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추진이 재개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스웨덴 등 2개 국가가 처분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처분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것임.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과 실제 처분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개발해야하는 방향에 도움을 주지만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유카 마운틴 처분장의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 중저준위 처분장이 과대하게 설계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중저준위 처분장의 의미를 국민들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임.

○ 토륨 원자로 개발에 대하여 (공화당 대선 강령)

토륨은 우라늄보다 4배 풍부하고 안전하며 폐기물 발생량과 독성이 적어 미래의 대안으로 꼽힘. 매장 국가도 호주와 미국, 터키, 인도,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등 거의 모든 대륙에 고르게 퍼져 있어 산출국이 편중된 우라늄에 비해 활용성이 높음. 특히 우라늄 가운데 현재의 원전에서 연료로 이용 가능한 동위원소는 우라늄-235뿐으로 비율이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토륨은 하나의 동위원소(토륨-232)로 돼 있으며 100% 연료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토륨은 우라늄과 같은 연쇄반응을 스스로 유지하기 힘들어 외부에서 중성자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경제성 면에서 부정적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것이 안전성 면에서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음. 즉, 우라늄원자로는 재임계와 같은 경우를 염려해야하지만 토륨원자로는 중성자 공급장치의 전원을 제거하면 바로 미임계 상태에 들어가게 됨. 이와 같이 토륨원자로의 독특한 유용성이 있기에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빌게이츠 등)들이 있지만 미국 전체의 아젠다로 자리 잡기에는 이르지 못함.

특히 토륨원자로를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 깔아야하는 인프라를 고려할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므로 연구개발 수준에서의 지원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임.

○ 참고자료

1. Andrew Follett, "Here's Where The 2016 Candidates Stand On Nuclear Power," The Daily Caller, February 20, 2016, <http://dailycaller.com/2016/02/20/heres-where-the-2016-candidates-stand-on-nuclear-power/>.
2. 2030년까지 자국 화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30% 줄인다는 규제정책 (Clean Power Plan) <https://www.epa.gov/cleanpowerplan>
3. http://energy.gov/sites/prod/files/2013/04/f0/brc_finalreport_jan2012.pdf

○ 붙임자료

Opportunities for the U.S.-Korea Energy Partnership under President Trump

November 10, 2016

By Alan Ahn, GABI Director of Programs and Communications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enjoyed a longstanding partnership in energy, ranging from decades-long civil nuclear cooperation to more recent collaboration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technology R&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opportunities exist for this partnership to expand and evolve in key areas, including oil and gas exports, clean coal technology R&D, and nuclear energy. Although considerable uncertainty remains--Trump has yet to confirm his appointments to energy-related Cabinet positions, such as the Energy and Interior Secretary posts[i]--Trump's campaign stances point to a number of themes that may define the U.S.-Korea energy relationship under his term.

U.S. Energy Exports to Korea

President-Elect Trump has vowed to support fossil fuel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eliminating regulatory barriers and moratoria on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rilling on federal lands; his energy plan entails unleashing "\$50 trillion in untapped shale,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ii] If such measures expedite U.S. progress towards becoming a net energy exporter, the U.S. could become a major supplier of oil and gas to Korea, simultaneously address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ted trade objectives[iii] (specifically, reducing trade deficits vis-à-vis U.S. trading partners, such as Korea) and strengthening Korea's energy security by diversifying its sources of supply.

Korea is overwhelmingly dependent upon Middle East suppliers for oil and gas--Korea imports approximately 84% of its crude oil and 53% of its liquefied natural gas from the Middle East, according to the latest EIA statistics[iv]--and has been subject to premium prices for these vital energy imports. Seek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has long been a national strategic objective for the ROK, and the North American shale boom has fostered optimism that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anada may ultimately become significant energy exporters to Korea.[v] Facilitated expansion of U.S. oil and gas production, in addition to accelerated development of the attendant infrastructure, would more quickly bring this vision to reality.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is a central priority for President-Elect Trump, and his campaign referred to studies indicating that the KORUS FTA has worsened the

U.S. deficit with Korea.[vi] Exporting surplus energy to Korea would help alleviate this bilateral trade deficit, without negatively impacting Korea's economic interests in the trading relationship--energy imports from the U.S. would simply displace imports from its traditional suppliers.

Clean Coal R&D Cooperation

President-Elect Trump's stated views[vii] on climate change are a conspicuous departure from thos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would certainly be in stark contrast with the general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vertheless, given his pro-coal stance and his promise to deploy such energy resources in "a clean and appropriate manner,"[viii] it would appear that he is likely to encourage devoting a greater portion of the country's energy R&D budget to the development of clean coal technologies.

The U.S. and Korea have existing collaborative arrangements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would capture carbon and other emissions and byproducts from coal-fired generation--in 2015, Atlanta-based Southern Company and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signed an agreement to explore joint development of such systems[ix]--and early signs sugges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probably back the cultivation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this area. For Trump, allocating greater attention and resources to clean coal R&D would be a clear manifestation of his support for the domestic coal industry and establishment. For Korea, successful deployment of these clean coal technologies would allow cheap and ubiquitous coal to play a more significant part in its energy mix without sacrificing its carbon mitigation and environmental goals.

Coal and other fossil fuels will remain a significant portion of global electricity generation for the foreseeable future. If joint U.S.-Korea R&D can boost the efficiency and reduce the costs of these systems, it could, perhaps unintentionally, benefit international carbon reduction efforts.

Nuclear Power

Nuclear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countries' energy mixes--approximately 20% and 30% of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U.S. and Korea, respectively--and President-Elect Trump has explicitly stated his wholehearted support for nuclear power: "I'm in favor of nuclear energy, very strongly in favor of nuclear energy."[x]

The U.S. and Korea recently renewed their bilateral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June 2015[xi]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be keen on better leveraging this partnership to bolster the competitiveness and global posi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particularly in emerging markets. Common issues, such as spent fuel management, may present opportunities for further deepening this relationship.

[i] Kelly O'Donnell, Vaughn Hillyard, and Corky Siemaszko, "Trump Team Reviewing High-Level Cabinet Appointments," NBC News, November 10, 2016,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www.nbcnews.com/politics/2016-election/trump-team-honing-high-level-appointments-n682116>.

[ii] "An America First Energy Plan," Donald J. Trump Presidential Campaign, last modified May 26, 2016,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s://www.donaldjtrump.com/press-releases/an-america-first-energy-plan>.

[iii] "Trade," Donald J. Trump Presidential Campaign,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s://www.donaldjtrump.com/policies/trade>.

[iv] "Korea, South - 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last modified October 5, 2015,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_includes/countries_long/Korea_South/south_korea.pdf.

[v] Chico Harlan, "Asia wants a piece of U.S. shale gas boom: Japan, South Korea seek lower-cost LNG," Washington Post, October 15, 2013,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wants-a-piece-of-us-shale-gas-boom-japan-south-korea-seek-lower-cost-lng/2013/10/15/ac161cb8-359e-11e3-89db-8002ba99b894_story.html.

[vi] Robert E. Scott, "U.S.-Korea trade deal resulted in growing trade deficits and more than 95,000 lost U.S. jobs," Economic Policy Institute, May 5, 2016,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www.epi.org/blog/u-s-korea-trade-deal-resulted-in-growing-trade-deficits-and-more-than-95000-lost-u-s-jobs/>.

[vii] Brad Plumer, "There's no way around it: Donald Trump looks like a disaster for the planet," Vox, November 9, 2016,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www.vox.com/2016/11/9/13571318/donald-trump-disaster-climate>.

[viii] "Voter Guide," Secure Energy for America,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secureenergyforamerica.com/voterguide/>.

[ix] Jordan Blum, "Southern Company and South Korea utility team up on clean coal," Fuel Fix, October 15, 2016,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fuelfix.com/blog/2015/10/15/southern-company-and-south-korean-utility-team-up-on-clean-coal/>.

[x] Andrew Follett, "Here's Where The 2016 Candidates Stand On Nuclear Power," The Daily Caller, February 20, 2016,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dailycaller.com/2016/02/20/heres-where-the-2016-candidates-stand-on-nuclear-power/>.

[xi] "USA and South Korea update cooperation deal," World Nuclear News, June 16, 2015, last accessed November 10, 2016, <http://www.world-nuclear-news.org/NP-USA-and-South-Korea-update-cooperation-deal-1606152.html>.